



팀 장 : 행정5급 이종하 (☎ 5132)
담당자 : 행정6급 김은주 (☎ 5133)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과 연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토론회 개요 >

- (때 · 곳) 2025. 10. 30.(목) 15:00~17:30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주 최) 충청남도의의회(신청 : 신순옥 의원)
- (주 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
- (참 석) 124명(도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충청남도의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보고서 ||

I. 총 평	1
II.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2인)	2
② 지정토론(6인)	4
③ 자유토론	10
III. 토론회 결과 및 성과	12
IV. 후속조치	12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 의 정 토 론 회 개 최 결 과

- 우리 도에는 '25년 9월 기준 약 1,7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대비 약 5.6% 수준으로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개최한 의정토론회 결과임

I 총 평

-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내 도민, 전문가, 관련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 124명이 참여하여 충청남도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및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정책과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토론회에는 법률·심리·복지·지역정착 지원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당사자가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단순 '보호 대상' 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을 도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 발표 (2인)

① 조성규 대표변호사(서도법무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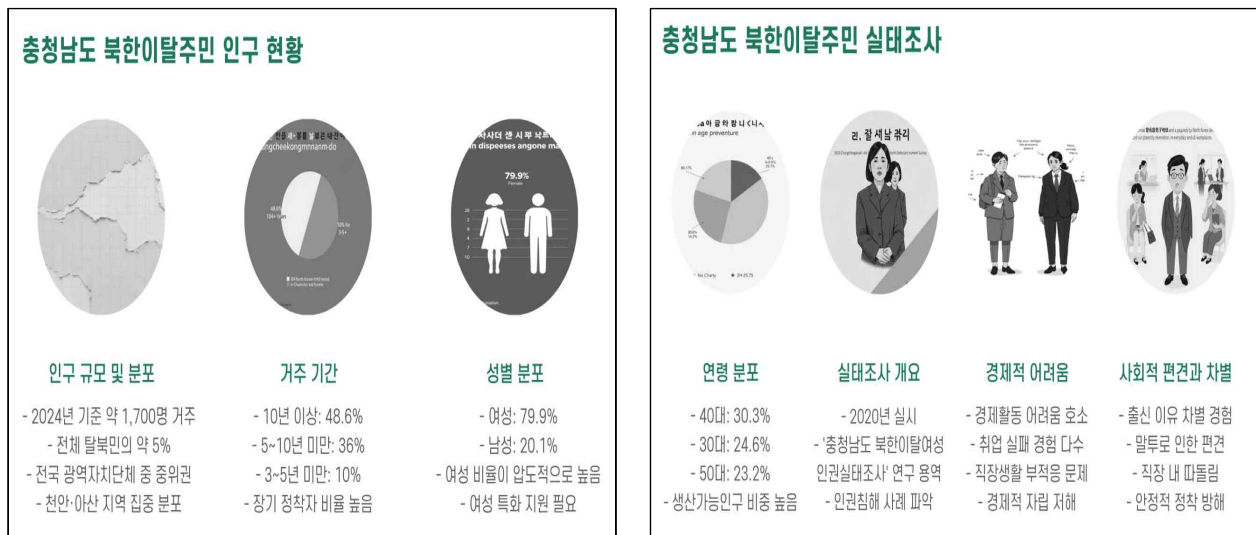
주제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단순한 복지 사안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즉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하며, 이는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의미함
- 그러나 현실에서는 탈북 과정의 위험, 제3국에서의 법적 보호 부재, 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서의 사회적 편견 등 연속적인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 언어·문화 차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노동시장 내 차별은 실질적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외부자나 보호대상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인식 전환이 최우선 과제임

② 송혜연 대표(사단법인 하나로드림)

주제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지원 강화 방안

- 충청남도에는 2024년 기준 약 1,7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며, 특히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비율이 79.9%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30~50대가 다수를 차지하여 경제활동 연령층이 중심임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착 만족도는 대체로 생활환경·의료 접근성 부분에서는 높은 편이나, 고용 안정성·심리 회복·사회관계 형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음
-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단순노무직·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임금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2%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직장 내에서 말투·출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소외감을 경험하거나 직장 갈등·조직 적응 실패로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함

-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률이 일반 국민 평균의 약 5배 수준으로 확인되며,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편견·낙인·문화적 거리감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
- 이에 충청남도 차원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고용지원 강화 및 탈북민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 전문직·기술직 중심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
 - 심리·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지역 정신건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참여와 상호 이해 증진
-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한 소수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임

2 지정 토론 (6인)

① 강은정 탈북방송인

주제 :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이야기

- 탈북의 개인적 경험과 한국 정착 과정에서의 실제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북한이탈주민 인권 문제는 법과 제도 이전에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강조함
- 탈북민들은 북한의 체제 경험과 탈북 과정의 위험, 가족과의 단절 등 심리적 상처를 안고 남한에 오지만, 한국에서조차 언어 차이·말투에 대한 조롱·출신에 대한 낙인과 같은 일상적 차별을 겪고 있음을 설명함

- 특히 “잘 왔다”, “열심히 살면 된다” 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주변의 무지·오해·거리두기가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임을 지적함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동정이나 보호가 아닌 ‘이해와 존중’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 교육, 지역 공동체 교류, 언어·문화 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② 정하늘(정대한) 대표(주식회사 북시탈스튜디오)

- 군 복무 중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과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탈북을 결심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영화 <탈주>에 자문·조연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을 이어오고 있음을 소개함
- 대한민국의 삶에 대해 “99%는 만족한다” 라고 표현하며, 남은 1%의 문제는 ‘제도’가 만들어내는 불편과 사생활 침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함
- 특히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상 보호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사생활·직장생활·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임의적 연장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존재함을 언급함
- 이는 보호 대상자가 원치 않더라도 사생활이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개인정보·일상 동선이 계속 관리되는 구조로 이어져 ‘안전을 위한 보호’가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지는 통제’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함.

-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일부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다수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이라고 강조하며, 신변보호가 ‘안정적 정착 지원’의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③ **정화성 대표(미래발전기획정책연구원)**

주제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장기화되었으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정착 과정에서 말투·문화 차이로 인한 차별, 취업·진학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음
- 충청남도 내 정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연계된 통합정책 강조
 - 제도 개선: 법령과 조례에 정착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 예산 확보: 정착금·취업장려금 등 실질적 생활지원 확대
 - 인식 개선·인권 교육: 도민과 탈북민 대상 교육을 통해 편견·차별 해소
- 결론 :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제도-예산-인식 개선이 함께 추진될 때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④ 윤담 센터장(충청남도인권센터)

주제 : 수용된 일탈주민의 상담을 하며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 → 탈출 과정 → 제3국 → 한국 정착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연속적인 문제임
 - 북한 내부 : 자유 제한, 정치범 수용소, 식량 부족, 정보 통제 등 구조적 인권침해 존재
 - 탈북 과정 · 제3국 체류 : 생명 위험, 인신매매 · 성폭력 증가, 중국의 강제북송, 법적 보호 부재
 - 대한민국 정착 이후 : 말투 · 문화 차이로 인한 차별, 취업 · 교육 어려움, 정신적 고립 · 트라우마 지속.
- 정책적 한계
 - 초기 지원 중심, 장기 자립 지원 부족, 탈북민 수 감소와 함께 예산 축소 경향
 - 일부 탈북민에 대한 감시 · 통제는 심리적 불안과 인권침해 우려 야기
- 국제 대응의 한계
 - UN 등 국제사회에서 난민 지위 인정 어려움
 -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국제 압박 효과 제한적
- 결론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는 단계별로 연속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를 해결을 위해서는 ▲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보호 체계 강화, ▲ 중국 등 제3국의 강제 북송 중단 및 보호정책 개선, ▲ 한국 사회 내 차별 인식 개선과 안정적 정착지원 확대, ▲탈북민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

⑤ 김주연 사무국장(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주제 : 복합가정으로 경험되어지는 북한이탈주민 가족문제

-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복합가정’ 형태가 많아, 서로 다른 언어·문화·성장 배경으로 인해 자녀 간 갈등, 정체성 혼란, 학교·지역사회 내 차별 문제가 발생함
- 복합가정 : 북한 출생 자녀, 제3국 출생 자녀, 남한 출생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 해체와 재결합이 반복되며 형성
- 부모는 탈북 과정의 외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정이 가족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도 다수임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가족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생계 지원이 아니라 ‘인권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핵심과제로 ▲ 자녀를 위한 정체성 혼란과 차별 해소를 위한 심리·정서·학습지원 강화, ▲ 외상 회복·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확대, ▲ 개인 지원 중심에서 가족 단위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 ▲ 다문화가정과 다른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제안함
- 결론 : 북한이탈주민 가족 문제는 소수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과 인권 실현에 직결되는 공적 과제로 가족의 안정과 회복이 곧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이며, 나아가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조건임

⑥ **황학수 자치화합팀장(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주제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현황
 - 2025년 9월 기준 1,754명 거주(전국의 5.6%)
 - 천안·아산에 55% 집중, 지역별 편차 큼
- 충청남도의 주요 정착지원 사업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충남하나센터 운영
 - 시군 특화사업 : 자녀교육·문화체험·의료·취업·멘토링·긴급구호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 가족통합교육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정서 지원, 가족구성원 전체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정신건강 지원 :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협업을 통해 심리서비스 제공
 - 초기 정착지원 : 도에 최초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위해 생활 필수 가전제품을 지원
 - 인식개선 및 기념행사 : 통일 공감 토크, 탈북민 이해 제고 교육, 북한이탈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 등
- 충청권 통일+센터 개관 예정('26.3.): 통일교육 및 통일공감대 강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수행 예정(총 사업비 137억 규모)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
 -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기존 사업 보완 필요
 -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 북한이탈주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병행

3 자유토론 (질의·답변)

①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및 가전제품 지원 관련

질의

《충청남도하나센터장》

- 동일 기수 탈북민들의 주거지가 천안·아산 등에서 지나치게 분산 배치되는 사례 발생하여 고립감과 지역사회 차별 인식으로 인해 우울·고립 심화, 심지어 자살 시도 사례도 존재함.
- LH가 배정하는 주거 위치 및 주거 질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함.
- 과거 충남은 양문형 냉장고 지원(1인 100만 원) 등 적극적 정착지원을 시행하였으나,
- 코로나 이후 예산 미집행 등으로 지원금이 반납되었다가, 현재는 1인 40만 원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임.
- 타 지자체는 오히려 탈북민 지원을 확대 중인데, 충남은 현재 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후퇴한 상황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가전제품비 지원 원상회복 또는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함.

답변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 LH 사업단에서 거주 문제에 대해서 인권 감수성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음.

②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네트워크 관련

질 의

《도솔문화포럼 회장》

- 탈북민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잘 연결·활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 탈북민들이 겪는 치과 치료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도 차원에서 연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제안함.

③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 규모 관련

질 의

《도솔문화포럼 회원》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의 규모는 연간 어느 정도인지?
- 1인당 책정한다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 예산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 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 순수하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 규모는 연간 총 약 5억 원 수준으로, 1인당 환산하면 약 연 28만 원 수준으로 실질 지원액은 매우 제한적임.
- 예산 축소의 원인은 도가 지원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며 감액되는 구조가 반복됨.
- 정착지원 예산 외에 관련 주요 사업으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총사업비 137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총 57억 원)이 있음.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결론

-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착 과정에서는 고립감과 사회적 낙인, 취약한 고용 환경, 트라우마 회복 지원 미흡 등 제도적 공백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운영 방식, 초기 주거 배치, 지역사회 내 관계망 형성, 정서·심리적 지원 부족 문제는 정착의 장기적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인식 개선, 심리·정서 회복, 고용 및 자립 기반 마련, 가족 단위 통합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성과

-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착 실태를 토대로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

Ⅳ 후속조치

- 의정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개선책 마련 검토
- 의정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의견)이 행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토론회 사진

참여자 사진



의정토론회 단체 사진 및 내빈 소개



축사(홍성현 의장)



축사(김영일 회장)

토론 진행



토론진행(신순옥 의원)

주제발표 및 토론



주제발표(조성규 대표변호사)



주제발표(송혜연 대표)



지정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언론보도 현황

제목 및 매체

번호	제 목	매 체 명
1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홍주포커스
2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뉴스티앤티
3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지이코노미
4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전국매일신문
5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서산시대
6	“차별 없는 공동체를 위해“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논의	아산뉴스
7	신순옥 충남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충청타임즈
8	신순옥,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연다	로컬투데이
9	충청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강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뉴스타운
10	신순옥 충남도의원, 30일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특급뉴스
11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북한 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충남일보
12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정책 강화 나서	메가충청뉴스
13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논의	투데이충남
14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오프라인뉴스
15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논의 !	뉴스세상
16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굿뉴스365

번호	제 목	매 체 명
17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시사픽
18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더존뉴스
19	충남도의회, 탈북민 인권보호 정책 모색... 차별 없는 공동체...	아산데일리
20	신순옥 충남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온주신문
21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해법 모색	네이트
22	신순옥 충남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시대일보
23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정착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가...	한국다문화 인터넷신문
24	신순옥 충남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방송
25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 및 정착 지원 정책 논의	충청메트로
26	신순옥 충남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엠뉴스
27	신순옥 충남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계룡뉴스저널
28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코리아경제신문
29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교육타임즈
30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해법 모색	브릿지경제
31	충청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미디어투데이
32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세계타임즈
33	충청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비례·국민의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충남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충청대세뉴스
34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충남도의회가 나섰다	마이민트
35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보도뉴스

번호	제 목	매 체 명
36	신순옥 충남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토론회 30일 개최	아시아투데이
37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시사종합뉴스
38	신순옥 충남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 증진 논의의 장 마련	코리아뉴스
39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신경북일보
40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충청일보
41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브레이크뉴스
42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충남팩트뉴스
43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내외일보
44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충남in
45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온양신문사
46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미디어뉴스타임
47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금산중앙신문방송
48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미디어이슈
49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케이에스피뉴스
50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세계연합신문
51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계룡뉴스저널
52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중부시사신문
53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검찰연합일보
54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내포투데이

번호	제 목	매 체 명
55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이슈타임즈
56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과워뉴스
57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덕양신문
58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특급뉴스
59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백제뉴스
60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영주방송
61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충남도의회가 나섰다	국제뉴스
62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충남도민일보
63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대한뉴스방송
64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미디어i
65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윈스텝뉴스
66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뉴스피플아이
67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굿처치뉴스
68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국제언론인클럽
69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경찰연합신문
70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시사캐치
71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SNS타임즈
72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충청메세지
73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행정신문

2025년 10월 31일 (금)

투데이충남

종합 02면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논의

천안시 의정토론회 열고 정책 대안 모색
심리·법률 지원 등 실효성 강화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와 도솔문화포럼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실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순옥 도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성규 서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송혜연 (사)하나로드림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 탈북방송인 강은정 씨, 정하늘 ㈜북시탈스튜디오 대표, 정화성 미래발전기획정책연구원 대표, 윤담 충청남도인권센터장, 김주연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사무국장, 황학수 충청남도 자치화합팀장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의 현황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탈북 과정에서의 정신적·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착 이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현실을 지적하며, 심리 치료와 법률 상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구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2025년 10월 30일 (목)

忠南日報

포토뉴스

[포토]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충남도의회와 도솔문화포럼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실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조성규 서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송혜연 하나로드림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현대경제

2025년 10월 30일 (목)

정치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 및 정착 지원 정책 논의

시사터치

2025년 10월 30일 (목)

대전/충남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정착지원 모색

누리일보

2025년 10월 30일 (목)

전국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시사일보

2025년 10월 30일 (목)

전국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내외일보

2025년 10월 30일 (목)

전국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뉴스앤충청

2025년 10월 30일 (목)

자치의정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신한뉴스

2025년 10월 30일 (목)

정치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특급뉴스

2025년 10월 30일 (목)

정치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